

고유가와 민생대책

이달석*

에너지경제연구원 석유시장분석실 선임연구위원

e-mail: dslee@keei.re.kr

국제유가 상승 추이

세계적인 대표 원유인 서부텍사스중질유(WTI)의 배럴당 연평균 가격은 2002년 26달러에서 2007년에는 73달러가 되었다. WTI 가격은 올해 들어서 급속한 상승세를 보여 지난 2월에 100달러를 넘어섰고, 4월에 110달러, 5월에 130달러, 7월에 140달러를 넘어서서 145.49달러로 사상 최고가격을 기록하였다. 아시아 지역에 판매되는 원유의 기준가격이 되는 중동산 두바이 원유의 가격도 지난 3월 처음으로 100달러를 넘었고, 7월 4일에는 140.07달러로 사상 최고가격을 기록하였다.

7월 중순 이후 국제 원유가격은 하락세로 반전되어 배럴당 120달러 수준까지 떨어졌다. 그렇지만 국제유가는 이미 제 2차 석유위기가 발생하였던 1980년의 가격을 실질가격 기준으로도 추월한 상황이다. 1980년의 WTI 연평균 가격은 배럴당 37.4달러로 미국 소비

* 저자 학력, 경력 및 최근 연구:

- 명지대학교 경제학박사
- 前 한국동력자원연구소 연구원, 現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신고유가 대응전략 연구>, <석유산업 자유화 이후의 동향과 과제>, <휘발유 소매가격 결정에 관한 연구> 등

자물가지수를 적용한 실질가격은 97달러에 해당한다. 또한 당해 연도에 최고가격을 기록한 4월의 월평균 가격은 배럴당 39.5달러로 실질가격으로 환산하면 104달러이다. WTI 가격은 지난 6월 평균이 134달러였고 1월부터 6월 말까지의 평균이 111달러에 달해 올해 원유가격은 실질가격으로 월평균과 연평균 모두 최고가격을 경신하게 된다.

고유가의 경제적 영향

고유가는 세계 경제와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유가 상승은 먼저 제반 물가를 상승시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게 된다. 다시 물가상승은 실질소득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와 가계 소비지출이 위축된다. 또한 물가상승은 소비지출의 둔화와 함께 제조원가를 상승시키기 때문에 기업의 투자지출이 위축된다. 한편, 유가상승으로 수입물가가 수출물가보다 더 많이 상승함에 따라 경상수지는 악화된다. 이와 같은 소비 및 투자의 감소와 경상수지 악화는 결국 경제성장률 둔화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사실 1970년대 두 차례의 석유위기를 경험한 이후 유가 상승은 인플레이션의 주요 원인으로 인식되어 왔고 유가 상승으로 인한 에너지비용의 증가는 경제성장을 위협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인식되어 왔다.

다행스러운 것은 그동안 고유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세계 경제지표는 비교적 안정되어 있었다. 세계 경제성장률은 2004년 이후 5% 내외를 유지해 왔고, 이런 높은 경제성장률 아래서도 물가상승률은 낮은 편이었다. 대부분 석유의 순수입국가들인 선진국 그룹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최근 몇 년간 2%를 조금 넘는 정도였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국내총생산(GDP)은 4~5%의 성장을 계속해 왔고 소비자물가도 지난해까지는 2% 대에 머물렀다.

1970년대 두 차례 석유위기 때와 달리 고유가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세계 경제와 우리 경제가 경기침체와 인플레이션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은 과거에 비해 유가의 경제적 영향이 상대적으로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산업구조가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이전되어 에너지를 적게 소비하는 산업의 비중이 커졌고 에너지의 이용효율도 높아져서 생산 단위당 에너지사용량이 줄었다. 선진국의 경우 GDP 단위당 에너지사용량은 1970년대의 절반 수준이고 에너지소비에서 석유가 차지하는 비율도 줄었다. 우리나라는 비록 GDP 단위당 에너지사용량은 크게 줄지 않았으나 석유를 다른 에너지원으로 대체해 에너지소

비 중 석유소비의 비율은 2차 석유위기시의 61%에서 현재는 44%로 줄었다. 그 밖에도 고유가의 영향이 감소한 이유로 과거와 달리 세계화의 진전으로 중국이 저렴한 상품을 세계시장에 공급해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올해 들어 상황은 크게 달라지고 있다. 계속되는 유가 상승이 소비심리나 투자 심리를 악화시키면서 경기는 둔화되고 물가는 상승하는 스테그플레이션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국제유가 수준이 크게 높아졌고 국제유가의 상승속도도 빨라지면서 세계 경제와 우리경제가 본격적으로 고유가의 영향을 받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평균 국제유가는 지난해 같은 월의 평균가격에 비해 거의 두 배가 상승하여 제 2차 석유 위기시인 1979년에서 1980년의 1년간 유가 상승 폭과 거의 유사한 정도에 이르고 있다.

상반기 중 미국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성장률을 겨우 면하는 정도에 머물렀고 중국경제도 물가의 급격한 상승과 함께 상반기 경제성장률이 전년보다 1.8%포인트 줄어든 10.4%에 그쳤다. 우리 경제도 수입물가 상승에 이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 4월부터 4%를 넘어섰고 6월에는 5.5%를 기록하여 유가 상승의 경제적 충격이 본격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고유가 민생대책 추진

유가 상승은 전체 소비지출에서 에너지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저소득층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되어 고유가 상황에서 서민생활의 고통은 더 심각해진다. 정부는 고유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겨냥한 일련의 민생대책을 추진해 왔다.

먼저 3월에는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12월까지 한시적으로 휘발유와 경유, LPG(부탄) 등 수송용 유류세를 10% 인하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른 가격인하 효과는 휘발유와 경유가 리터당 각각 82원과 58원, LPG(부탄)가 리터당 17원이었고, 정부의 지원규모는 1조 3천억원이었다. 또한 5월에는 택시용 LPG(부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전액 면제하였고, 1천cc 미만의 경차에 대해 연간 10만원 한도에서 유류세를 환급하도록 하였다.

정부는 석유시장의 경쟁을 통해 석유제품 가격을 인하시킨다는 취지로 석유제품 유통 부문의 개선을 위한 다양한 조치도 시행하였다. 여기에는 4월 15일부터 시작된 주유소 판매가격에 대한 실시간 공개시스템 가동이 포함되어 있다. 또 4월 30일에는 석유수입업자에 대한 비축의무를 정유회사와 동일한 기준인 40일분에서 30일분으로 줄이는 내용으

로 관련 고시를 개정하였다. 아울러 4월부터 석유제품 수입관세율을 3%에서 1%로 조정하여 원유와 석유제품에 대해 동일한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이 외에도 석유대리점과 주유소 등 동종 판매업자간의 수평거래 허용, 석유제품 선물시장 상장 등을 추진 중에 있다.

지난 6월 8일에는 정부가 ‘고유가 극복 민생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고유가로 인한 저소득층의 경제적 고통을 완화하는 대책으로서 1년 동안 한시적으로 근로자와 자영업자,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조세환급을 실시하고 저소득계층에는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근로자와 자영업자에 대한 조세 환급은 유류비 부담 증가분의 일부를 소득세 환급을 통해 보전하는 것으로 각각 총 급여 3600만원과 총 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에 대해 연 24만원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전체 근로자의 78%에 해당하는 1300만명과 전체 자영업자의 87%에 해당하는 400만명 정도이다. 사업용 차량에 대한 유가 환급금은 기존의 유류세 보조금제도를 유지하면서 유가상승분의 50%를 추가 지원하는 것이다. 농어민에 대해서도 기존의 유류세 면세제도를 유지하면서 유가상승분 50%를 추가 지원하기로 하였다.

또한 1톤 이하 자가 화물차에 대해서도 경승용차나 경승합차와 같이 연간 10만원 한도 내에서 유류세를 환급하기로 하였다. 저소득층의 부담경감을 위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 86만가구를 대상으로 유류비부담 증가분의 절반에 해당하는 월 2만원의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중증 장애인 3만가구에 대해서도 같은 수준의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민생 종합대책에 총 10조 5천억원의 지원 금액을 사용할 계획이다. 재원조달의 한계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충분한 지원 규모라고 볼 수는 없으나 획일적 지원보다 선별적이고 직접적인 지원을 통해 민생대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 지원방법은 타당한 것으로 평가된다.

향후 고유가 민생대책의 방향

고유가 상황에 직면하여 민생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보다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는 대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중요하다. 특히 서울을 비롯한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공공요금 등 다른 부문의 물가인상을 부채질 할 수 있는 요인을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한편 최근의 물가상승은 고유가와 원자재 가격의 급등 등 수입물가의 상승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외부적이면서도 비용요인에 의한 물가상승이 나타나는 현 상황에서 유동성을 증가시키는 통화정책은 분명히 잘못된 정책이다. 또 국제유가 상승과 원자재 가격의 상승은 달러화의 약세도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유럽이나 일본과 같이 가능한 대미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의 하락을 허용하는 것이 물가상승 압력을 줄이는 적절한 방안이다. 수출축진에 의한 성장률 확보를 목적으로 환율을 상승시키는 정책은 수출대기업을 위해 민생경제를 희생하고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더욱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한편, 중앙은행이 물가안정 목표를 설정하고 통화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경제주체들의 기대 인플레이션을 안정화시킴으로써 일시적인 물가상승의 충격이 일반적이고 지속적인 물가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국제유가 상승에 의해 국내유가가 상승하고 이러한 국내유가의 상승이 임금이나 일반적인 물가상승으로 발전하는 2차적인 파급효과를 억제하기 위한 통화당국의 주의 깊은 관찰이 요구된다.

그러나 국제유가의 상승에 따른 국내유가 인상요인을 상쇄시키기 위해 유류세를 인하는 방안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가완충을 목적으로 한 유류세 인하정책은 국제유가의 급격한 상승으로부터 생기게 되는 국내유가의 급등을 억제함으로써 유가 급등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될 수는 있다. 즉, 1990년의 걸프전쟁 때와 같은 단기적으로 가격이 폭등했다 하락하는 상황에서는 국내유가의 인상요인을 흡수함으로써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적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과 같이 국제유가가 장기적으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인 상황에서 유류세 인하는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세수 감소로 인해 정부의 재정운용에 대한 부담만 줄 수 있다. 따라서 국제유가 상승에 의한 가격 인상요인은 국내유가에 적절히 반영됨으로써 경제주체들로 하여금 변화된 외부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고 에너지소비절약도 유도해야 한다. 국제시장에서 석유의 경제적 가치가 상승하고 있는데도 국내시장에서 그 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않는다면 석유자원의 낭비와 비효율적인 자원배분 문제를 야기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유류세와 관련한 논의는 유가의 완충을 위한 일률적인 유류세 인하가 아닌 연료간 상대가격의 왜곡이나 소득역진적인 과세체계의 시정 등에 모아질 필요가 있다. 석유제품

중에서 등유 세금 문제가 그것이다. 등유 세금은 여타 가정용 연료와 비교해 너무 높게 책정되어 연료간 상대가격체계를 왜곡시키고 소득역진적인 과세구조를 가져왔다. 즉, 등유에 대한 과도한 세금은 중산층에서 주로 사용되는 전력, 가스, 지역난방 등에 비해 저소득층이 주로 사용하는 등유를 열량당 가격이 가장 높은 연료로 만들었다.

마지막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복지대책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올해 7월부터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근로자 및 자영업자에 대한 유가 환급금과 사업용 차량과 농어민에 대한 유가 환급금 제도는 이후에도 국제유가가 하락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재원조달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가구에 대해서는 생계급여에서 광열비를 분리하여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정부가 기초생활수급가구에게 일정액 또는 일정량에 해당하는 에너지 구매권을 부여하고 그 공급자에 대해서는 사후에 대가를 지불하는 제도이다.

참고문헌

- 이달석 외, 2007.12, 『신고유가 대응전략 연구: 유가상승의 원인과 파급효과 분석』, 에너지경제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07-12.
- Economist, August 27, 2005. "Oil and the Global Economy", pp.55-56.
- LeBlanc, M. and M.D. Chinn, April 2004, "Do High Oil Prices Presage Inflation?", Business Economics, pp.38-48.